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

알렉산더 버시바우
현 주한미국 대사,
전 주러시아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대사

보튼-모슬리 유라시아 석학 강연
컬럼비아 대학
2007년 4월 26일, 뉴욕

캐서린 네팜냐세스키 해리먼 연구소 소장님, 마이런 코헨 웨더헤드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님, 저를 올해의 보튼-모슬리 유라시아 강연의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및 러시아 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휴 보튼과 필립 모슬리를 기념하는 강연 시리즈에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미국무부 차관 및 전 주일대사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연사로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모닝사이드 하이츠는 제가 1976년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곳이자 수많은 외교관 및 소련연구가 지망생들의 훌륭한 조언자였던 마샬 슐먼 교수님이 소장으로 계셨던 러시아 연구소에서 수료증을 받은 곳이기도 해서 여기서 강연하게 된 것을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동북아시아, 즉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중 몇몇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고 이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제가 일년 반 동안 수행해 온 주한미국대사로서 가지고 있는 시각과 과거 주러시아 및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대사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한 유라시아적인 시각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연설의 대부분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연설의 자유로운 성격을 감안해 연설 후에 있을 토론 시간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바랍니다.

미 국무부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위기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이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현재를 뛰어넘어 5년, 10년 후의 동북아시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죠. 서로간의 역사적 반목과 의심이 아니라 지역 공동의 이해와 국경을 초월한 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북아시아가 가능할까요? 하나의 완벽한 경제 블록으로서의 역동적인 동북아시아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논의 분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북아시아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 즉 북한에 대한 고찰, 둘째,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총체로 보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협력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 마지막으로 이 같은 방정식에서 미국의 이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한국 출신으로 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과거 했던 말을 통해 제가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엿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국 외교부 장관 재직 시절 “하버드 리뷰”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6자회담을 아시아판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CSCE)”의 초기 단계라고 볼 지 모르겠습니다. CSCE는 각기 상이한 가치와 이상을 가진 유럽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이해가 걸린 다양한 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 미래를 위한 전략적 비전을 공유할 때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선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과제, 즉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북한의 선택

북한은 전략적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북한이 내릴 결정은 동북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은 비핵화냐 아니면 더 깊은 고립이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만약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은 54년 전 한반도의 일시적 휴전 체제를 위해 체결된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체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몇몇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상당량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만약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사실상 더 깊은 고립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의 엄격한 이행을 추진할 것이며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2003 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6 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내면서 이 다국적 접근 방식이 가진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2.13 합의에서 북한은 “영구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및 봉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여러 기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플루토늄을 생산한 곳입니다.

이 “1 단계”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6 자회담에 참여한 다른 5 개국은 1 단계보다는 2 단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단계에 들어서면 북한은 자국의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폐기를 약속한 모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이 2 단계 조치를 끝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궁극적인 목표인 마지막 3 단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의 폐기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자국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송금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비핵화 초기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60일 시한을 넘긴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 및 영변 핵시설 폐쇄 조치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2.13 합의 이행과 IAEA 사찰단 초청 의지를 재확인한 북한의 4월 13일과 20일 성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강조해왔듯이 6자회담과 2.13 초기조치 합의 및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은 관계 정상화 및 에너지,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북한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에 제공될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이 어떤 결과로 끝날 지 모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6 자회담을 통해 오늘 토론과 관계가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미 얻어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동북아 국가들과 이 지역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6 자회담에서 중국이 보여준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 월 설치된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의 의장을 맡음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보여준 점에도 고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 자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욱 긴밀히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매우 절실한 경제 지원 문제를 다루는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의장을 맡은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과 관련된 또 다른 사항은 러시아가 동북아의 신뢰 구축 체제 및 안보 협력에 대해 막 논의를 시작한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실무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실무그룹들이 다소 관료적으로 들릴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실무그룹들이야말로 6 개국 정부가 서로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 자회담을 제도화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이런 실무그룹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작년 10 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후 부시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은] 6 자회담의 공동 성명을 이행할 경우 누리게 될 번영과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의 기회를 북한 주민들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며 전세계적인 핵확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제거는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 동북아의 핵심 과제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6 자회담을 뛰어넘어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경우 어떤 경제적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럼즈펠드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밤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즐겨 보여주곤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국과 중국 지역 대부분은 불빛으로 가득한 데 반해 북한은 평양 한 군데에만 점같은 작은 불빛이 흐릿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글자 그대로 북한 지역에 불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선, 심한 굶주림과 박탈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이미 성공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개발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촉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북한이 한국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진행중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

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면 북한에 더 많이 투자할 것입니다. 중국 및 다른 국가 기업들 역시 북한에 대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아직 요원할지 모르며 또한 남북한 양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6 자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한은 분명 더욱 긴밀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서울역 앞에는 향후 가능할 지도 모를 한국 남부 도시 부산과 프랑스 파리를 잇는 열차 여행을 선전하는 게시판이 서 있습니다. 북한이 동북아의 한 국가로 완전히 융합된다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열차선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냉전의 잔재이며 경제적으로 동북아라는 그림 퍼즐에서 아직 맞춰지지 않은 중요한 조각입니다. 북한은 현재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이 지역의 보다 큰 번영을 가능케하는 잠재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동북아시아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의 중심과제인 북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지역으로서의 동북아시아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지역’이란 말이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은 미해결 역사 문제와 다양한 정부 체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동북아의 역동성과 증가하는 경제적 중요성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4 분의 1(23%), 전 세계 소득의 18%, 세계 무역의 14%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천연자원을 보유한 극동 러시아까지 더하면 이 지역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지역의 역동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의 수출액은 2001 년 이후 186% 성장하여 2005 년 7,600 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 년간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역시 각각 89%와 47%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내 국가간 거래도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대중 무역액은 1992 년 양국간 국교가 수립된 직후 50 억 달러였던 것에서 24 배 증가하여 2006 년에는 1,180 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동북아 지역 내 무역은 1999 년에서 2003 년 사이 태평양 연안 국가간 무역보다 3 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5 년간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 성장하였습니다. 미국은 동북아를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최근 10 개월의 협상 끝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미 FTA 는 미국 기업 및 서비스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늘릴 뿐 아니라 중국 등 기타 국가의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북아 경제 성장이 사실상 경제 상호의존도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더욱 공식적인 경제 통합과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협력 및 안보 대화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가 한중일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이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극동 러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쇠퇴와 인구 감소를 역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실상의 경제 통합은 주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위한 최고의 자원과 시장을 모색하는 가운데 내린 개별적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지역 국가들—특히 일본—이 무역 장벽을 더욱 낮춘다면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 역시 이처럼 강화된 지역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연료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연구를 위해 동북아가 뜻을 합쳐 각국에 전문 부서를 둔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면 어떨까요? 동북아 지역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바로 플라즈마 TV 와 영상 휴대폰을 현실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연구소는 1996 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의 에너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연구 센터의 동북아시아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동북아의 거대한 에너지 시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는 석유 및 가스 공동 프로젝트와 수송관 개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무부의 로버트 매닝은 아시아가 공동으로 직면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에너지는 충돌의 원인보다는 협력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는 통합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닝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는 엄청나므로 아시아 국가들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방법으로 국가간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전력망 연결, 에너지 공동 비축, 해적행위 공동 대처 등이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 국가들이 안보 문제 협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으로써 번영과 효율에 관한 공통의 관심이 뚜렷하게 나타난 경제 통합을 증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적 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 학생 1,000 명과 기타 아시아 국가 학생 5,000 명을 자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박수를 보냅니다. 동북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의 학부모들 역시 가처분 소득의 상당부분을 자녀의 과외 교육에 사용합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이—미국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동북아 학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국어를 구사하는 우수학생들을 각국의 명문대학에 초청하면 어떨까요? 이는 한중일 삼국이 2003 년부터 7 월마다 개최하고 있는 ‘미래 지도자 포럼: 일본-한국-중국’을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상은 또한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아시아를 위한 지식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에도 일치합니다.

다른 가능한 일들로 고비 사막의 황사 등 환경 문제와 전염병, 기후 변화, 자연 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같은 공통의 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 간에 아직 불신과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은 미약하게 시작하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점차 신뢰를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북아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이처럼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구상들에 관한 논의가 예전에는 없었다고 생각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지도자들은 그동안 참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1999년 이래 개최되고 있는 삼국 정상회의에서 2003년 한중일 지도자들은 경제 관계, 무역, 투자, 재정,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 통신 기술, 과학기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월 이러한 협의 하에 있었던 진척사항을 보고하면서 지도자들은 한중일 관계자 및 학자들 간의 연대가 경제 무역, 정보, 환경 보호, 인적 자원, 개발 문화 등 다섯가지 우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협력 증대의 중요한 신호임에는 분명합니다. (비록 이 경우 참여가 삼국에 국한되어 러시아나 미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동북아 협력 수준을 높이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아시아 지역주의를 증진하려는 더욱 광범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관련된 것으로는 1994년 설립되어 유럽연합 의장국 뿐만 아니라 북한,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5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있습니다. ARF는 신뢰구축 방안부터 예방외교 체제 구축, 분쟁 해결 방식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치 안보 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증진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ARF는 비확산, 재난 구조, 해상안보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치있는 노력이지만, 지역 고유의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은 1994년 방콕에서 열린 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제안하였으나 중국과 북한의 반대로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APEC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간 관계에 있어 앞으로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 30대 항만 가운데 21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APEC이 아시아 제일의 지역 경제 협력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APEC은 앞으로도 미국의 최고 수준의 참여가 기대되는 연례 포럼이 될 것입니다.

APEC 은 창설 이후 자유 무역과 투자, 반부패에서 유행성 독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역량 개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중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01 년 이후 APEC 은 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 위협과 싸우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APEC 은 앞으로도 중심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RF 와 마찬가지로 APEC 역시 동북아시아의 고유한 문제들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APEC 의 회원국 수와 지리학적 범위를 감안할 때 APEC 을 동북아 지역간 협력에만 국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하위 지역 기구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존하는 또다른 모임으로는 아세안+3 가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별도로 협의를 갖고는 합니다. 또한 동북아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정부 차원의 노력인 ‘Track II,’ 1993 년 설립된 싱크탱크인 아·태 안보협력이사회, 마찬가지로 1993 년에 국무부의 지원아래 설립된 동북아협력대화 등이 있습니다. 요점은 동북아 협력 증대를 위한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는 것이고, 이제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씨앗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시안적인 구상의 혜택을 거두어 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 통합의 장애물이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유럽의 변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닉 버틀러는 2003 년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립 밴 윙클이 60 년 전에 잠들어서 오늘 깨어났다면 그는 유럽에서 가장 놀랄만한 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즉, 20 세기 초 50 년 동안 여러 차례의 끔찍한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싸웠던 국가들이 지난 반세기동안 그들의 부를 합쳐 복잡한 정치 경제적 협력망을 구축했다는 사실 말이다.”

여기에 미국이 마셜 플랜 시절부터 오늘날 NATO 와 EU 확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럽 통합 단계에서 촉매 역할을 해왔다는 점과 우리는 동북아와 그보다 더 넓은 아태지역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통합 증진을 제안할 때, 저는 단지 모든 지역 지도자들이 이미 했던 말을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2003 년 취임연설에서 “현대 세계의 변방에 있던 동북아는 이제 세계 경제의 동력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동북아시아와의 대화 증진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해 연설에서 “한중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둘째로 중일, 한일 관계가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더 광범위한 관점에

굳건한 기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공동 성명의 일환으로, 양국은 “아시아의 평화, 안정, 개발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양국은 동북아 안보 유지, 지역 에너지 협력 증대, 동아시아 통합 증진, 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할 기타 주요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러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외부 여건을 받아들이기 위해 러시아의 대외 포용 정책을 강화하려는 뜻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미국, 유럽 연합, 유럽 각국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 중국, 인도,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역 협력 증진을 지지하는 것과 그러한 협력을 현실화하는 것은 별개일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동북아시아에 아직 남아있는 역사적 긴장과 심각한 불신이 사라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특히 북한핵문제 해결 이후, 하지만 그 이전에도—동북아시아는 잠재적으로 지역 포럼이나 제도 창설로 이어질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증대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방법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 미국의 이해관계

본 강연을 맺기 전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미국 동북아 정책의 토대로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기본적 가치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11월,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 이 지역을 순방하여 이 나라들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존 네그로폰테 부장관도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동북아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양국 의회의 비준이 남아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KORUS FTA)을 경제적 측면에서의 “원원” 협정만이 아니라 양국 동맹관계의 중요한 새로운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관계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가치 격차 (value gap)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인권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국제사회 규범에 준하여 탈북자들을 대우하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6)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중국이 “책임있는 이해 당사자”로서 국제 안보와 안정에 발전적 기여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적하듯이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연성 권위주의 국가”(soft authoritarianism)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고 엘친 대통령의 추모식은 이 나라와의 “가치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실감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한국에서의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시아는 우리와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관리, 유도한다면 이 지역과의 협력과 대화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과거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6자회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6자회담이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노력이 성공한다면, 6자회담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2.13 합의 채택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노력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어야 하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장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새로운, 상설 안보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체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유럽연합(European Union)처럼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미래 지향적 정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꽤 야심찬 동북아 외교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처럼, 우리 정치, 기업 지도자들이 경제통합, 활발한 인적 교류, 법치, 무엇보다, 공동된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정부간 노력을 바탕으로, 동북아를 하나로 묶기 위한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한미국대사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제가 한국 부산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기차로 여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견지명과 인내를 갖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실현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